



# 주민 직선 교육감 시대의 의의

전국 최초로 주민 직선에 의해 실시된 교육감 선거가 앞으로 타시·도에서 실시 예정인 주민 직선 교육감 선거의 초석이 되고 선거 관련 제도의 개선에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드러난 문제점의 보완과 함께 학부모 및 모든 시민의 교육 주권 회복의 기폭제가 되어 우리나라의 진정한 지방교육자치가 활짝 꽃피우기를 기대해 본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설 동근  
051)866-3000

지난해 12월 2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금년 2월 14일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주민 직선 교육감 선거가 실시되어 지방교육자치 시대의 선 교육감이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전기를 활짝 열리게 되었다.

필자는 검증된 부산교육의힘'을 캐치프레이즈로 사교육비경감, 학교급식개선 및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인성교육의 강화, 투명한 교육 행정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 최초의 초대민선 교육감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그러나 짧은 선거운동기간, 주민 직선 교육감 선거에 대한 시민의 인식

부족등으로 많은 문제점도 한드러내기도 하였다.

이전에 실시했던 교육감 선거는 초·중·고교교사와 학부모 및 지역인사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간접선거로 뽑았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특정단체나 세력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가 물표를 받거나, '향응', '줄서기' 등 폐단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간접선거에 나타난 여러 부작용을 없애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교육자치를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개정되어 실시한 것이며, 개정된 법률은 교육감 후보의 정당 공천을 금지하고 후보자도 후보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로 명시하는



등 엄격한 중립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번 부산에서 실시한 교육감 선거는 대통령 임명제(제1대9대), 교육위원화간선제(제10대), 운영위원회 간선제(제1대13대)를 거쳐 사상 처음으로 주민들이 직접 지방교육의 수장을 뽑았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올해는 부산을 비롯하여 충북, 경남 등 세 곳에서 내년에는 서울, 제주 등 5곳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임기는 4년이지만 2010년 6월 30일까지로 제한된다. 이는 2010년 5월로 예정된 전국 지방선거와 동시에 교육감 선거를 실시하여 선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자 호헌투표율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직선 교육감이 가지는 가장 큰 차별성은 '확실한 주민대표성'을 가짐과 동시에, 정책수립과 집행 과정에 주민들의 의사나 요구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교육정책을 펴 나가야 하는 강한 책무성을 가진다는 점일 것이다. 또한 그동안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던 학부모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교육참여권을 회복해 줌으로써, 진정한 지방교육자치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 교육감 선거는 짧은 선거기간, 직선제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예상한 것보다 낮은 투표율로 아쉬운 점이 많았다. 이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발효된 지 46일 만에 선거가 실시되어 선거일 120일 전에 예비후보등록을 하는 자치단체장 선거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턱없이 짧은 선거기간인데다가 부산 지역 시민단체 등이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으나, 또한 받아들이지 않아 유권자의 무관심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유권자들이 투표

투표에 참여할 당위성을 충분히 홍보하기 전에 선거를 실시하여 선거 분위기를 제대로 띄우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다. 또한 '교육감도 우리가 뽑아야 되느냐?'고 반문하는 시민들이 대다수일 정도로 교육감 선거가 시민들의 자녀 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되지 못했고, 대부분 시민들이 교육감의 위상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

교육감은 고등교육을 제외한 유·초·중·고·약교 교육은 물론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며, 학군조정, 학교신설, 교원인사, 평준화 시 여부 등 중요한 교육 현안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부산의 경우, 교육감은 부산 시민이 내는 세금 4,000여 원을 포함해 연간 약 2조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이는 부산시의 올해 전체 예산 6조원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또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5조 9,000여 대의 국·공유 재산 관리, 지역 교육장과 국립학교장을 비롯해서 약 2만 4천 명에 달하는 교직원에 대한 인사, 학교 설립과 폐지, 그리고 고위 지원설립에 관한 인·허가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이다. 특히 교육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순전히 지역의 유·초·중등학교 교육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평생 학습 프로그램 개발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등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교육감의 위상에 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왜 교육감을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과 중요성을 인식치 못한 채 많은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치러질 타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실시해야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 선출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교육감선거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주민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여 교육감을 선출해야 하는 중요성을 교육감의 위상과 관련하여 선거운령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시민단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야 하며,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통해서도 시민의 관심을 갖도록 특집 보도 및 방송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 운동 방법을 다양화·활성화하여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벽보 및 현수막, 가정에 송부되는 후보자 리플릿 등은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을 검증하기에는 매우 빈약한 자료가기 때문에 현 선거 방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거리유세 및 연설을 활성화하고 블로그, 이메일, UCC(사용자제작 동영상 콘텐츠) 등은 라인으로 영역으로 선거 방법을 더욱 확대하고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언론기관 및 사회단체 등 각종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후보자 간의 토론회의 횟수를 대폭 늘리는 등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2010년 5월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전에 이루어지는 시·도 교육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투표율을 높여야만 대표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으며, 교육감에 대해 더욱 강력한 힘을 실어 주어 지방자치단체장 궐등 한 위치에서 시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소신 있게 계획·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현실은 불안한 대입고사 및 학벌 중심의 사회분위기, 학교교육의 불신에 따른 사교육 수요의 증가, 학교시설 환경 악화 후성, 지역 간 계층간

의 교육격차 증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 제 주민직선 교육감은 이러한 현안 문제를 직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적인 협의를 통하여 주민들에 계획과 행복, 화합으로 나아가는 교육을 실현해야 할 무거운 책무를 갖는다. 앞으로는 선 교육감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열악한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며, 학력을 신장할 수 있는 공교육의 내실화와 과학교육 활성화, 사회양극화 심화로 발생한 교육격차 해소 등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과 함께 가꾸어 가는 교육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및 기업 등과 연계한 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현안 논의와 자문을 해 시민 및 지방자치단체, 직능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재정 확보 문제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없다.

현재 16개 시·도 교육청의 부채는 약 2조 5,367억 원으로 부족한 교육재정의 확보 문제는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교육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시도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GDP 대비 6% 수준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내국세의 교육예산비율을 0%에서 21% 수준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선거로 '주민대표성'을 확보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와의 의를 통해 비법정선입금 및 교육경비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발전기금 성에 대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여 재정 지원 유도 함으로써, 개별 지역 내 기업체 등 다양한 기관들이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2월 27일 국회교육위원회에서 '학교용 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 국회교육위원회를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추후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교육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앞으로 이 법안이 발효되면 부산의 경우 환급액이 약 240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타시·도 교육청와 함께 교육재정의 압박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긴밀한 논의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교육 또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사교육이 심화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경쟁을 유발하는 접수 위주의 평가제도와 외천 대학 입학제도에 영향을 있지만 현재의 학교수업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대학입시 제도의 개선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도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교육 내실화의 핵심은 수업의 질을 높임으로써 과외 요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수업을 강화함으로써 학습 결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개인차가 심한 수학, 영어 교과에 대해 현재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중학교에도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 또한 방과 후 교육을 통하여 능력별 반편성에 의한 맞춤형 식별화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그밖에 도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 계층 및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생교육의 활성화 등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 민선 교육감에 의한 지방교육자치 시대개시로 부터 활짝 열렸다. 이번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주민 직선에 의해 실시된 교육감 선거가 앞으로 타시·도에서 실시 예정인 주민 직선 교육감 선거의 초석이 되고 선거 관련 제도의 개선에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드러난 문제점의 보완과 함께 학부모 및 모든 시민의 교육주권 회복의 기폭제가 되어 우리나라의 진정한 지방교육자치가 활짝 꽃피우기를 기대해 본다.

기술표준 2007. 4

